

국제화·개방화 대응대책

1. 환경과학기술 개발

- 우리나라의 환경기술수준은 선진국에 비하여 대기, 수질 분야는 60~80%, 폐기물 소각·환경 청정기술은 20~30%에 불과하다.

2001년까지 2,315억원을 투자하여 환경개선 및 수입대체 효과가 큰 21개 핵심기술을 선진공업국 기술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고 '93년에는 15개 과제에 87억원을 지원하여 연구 착수하였고 관련업계, 연구기관 공동으로 저공해 소각 기술개발 등 선도기술개발 계획(G-7프로젝트)의 환경공학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94년에 필요한 296억원 중 99억 원은 재정에서 지원하고, 부족분은 환경오염방지기금 및 민간 부담을 확대로 충당하는 등 차질없는 재원 조달방안 강구하며 한·중, 한·일 환경연구원간의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중국, 태국등 아시아 개도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환경기술 연수를 실시하여, 환경산업 수출기반을 조성하는 등 미국, 일본, 프랑스등 선진국과의 환경기술협정을

구체화하여 전문인력 교류, 공동연구사업을 전개한다.

2. 그린라운드(GR) 대비

- 각종 국제환경협약에 의한 무역 규제와, 일부 선진국이 환경규제 기준 차이에 대한 상계관세를 도입하려는 추세에 따라, 무역과 환경에 관한 국제규범을 제정하려는 움직임

〈국제적 동향〉

지구환경보호를 위하여 발효중인 150여개 국제환경협약 중 17개 협약에 이미 무역규제수단이 포함되어 있으며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73),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87) 등이 그 예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자국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환경규제기준의 국가간 차이에 대한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클린턴 대통령은 미무역대표부(USTR)에 무역규제와 환경문제를 연계하는 차기 다자간 무역협상대책을 수립 지시하였다.

('93. 7)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제품의 생산, 소비 전 과정이 환경에 적합한지를 인증해 주는 국제환경표준 규격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GATT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별도 작업반을 구성하여 그린라운드 준비에 착수, 향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환경기구(UNEP)도 세계 각국 환경장관회의를 소집('94. 2)하는 등 그린라운드에 대한 입장 정립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그린라운드는 우리경제 전반에 걸쳐 우루과이라운드에 못지않은 영향을 가져올 전망이며 범정부적인 사전대비 필요하다.

〈그린라운드 대처 방안〉

주요 국제환경협약에 조기 가입을 추진하면서 국내 수용대책을 강구하는 적극적 대응방향으로 전환하고 이미 발효된 바젤협약 및 생물다양성협약에 금년중 가입하고, 구체적 이행의정서 제정 협상에 적극 대응한다.

금년 2월중 미국, OECD등에 조사단을 파견하고, 해외환경주재관

(4명)과 공관등을 활용하여 국제동향의 신속 입수체계 구축하고 선진국에서 실용화 단계에 있는 저공해 제품·공정기술 개발현황을 조사, 문제제기가 예상되는 사항을 파악 하며 선진국의 환경규제기준과 국제환경표준규격기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내기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기존의 지구환경대책기구(관계장관대책회의, 차관급 실무회의)가 중심이 되어 그린라운드 대비 범정부적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유관부처에 전담부서를 지정·보강하여, 정책수립시 환경측면검토를 제도화하며 환경처는 산·학·연전문가를 포함한 그린라운드 대책협의회를 연초에 구성,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3. 최근 미국, 일본의 환경정책동향

본란에서는 북미 자유무역 협정(NAFTA)의 승인, EPA의 각료급 격상을 위한 하원위원회의 승인, 펄프·제지업에 대한 규제강화 등 미국의 최근 환경관련동향과 일본 환경기본법의 중의원 통

과, UNCED 후속조치를 위한 시민연합결성 등 일본의 환경정책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미국의 환경정책동향

최근 미국정부가 환경기술 육성을 위한 주요계획을 마련한 바에 따르면 환경기술 수출의 촉진이 미국의 경제활성화는 물론 개도국이 환경을 해소시키지 않고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돋는 것이라고 하면서, 환경기술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 인도등에 주재하는 대사관 직원을 활용하여 현재 부족한 관련 환경정보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며, 환경기술 및 서비스시장이 현재 2,000억불 규모에 달하고 있으며 2000년까지는 3,000억불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술혁신을 위한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하원이 지난해 11월 중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을 승인함에 따라, 하나의 거대한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고 역내 무역 및 투자장벽이 감소하게 되었다. 한편 NAFTA의 노동·환경부속

의정서에는 환경 및 노동 보호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 협정은 '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93년 11월초 미국 하원의 정부운영위원회는 EPA(미국환경보호처)를 각료급부처로 승격시키는 법안을 승인함에 따라 하원과 상원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동 법안은 EPA를 환경보호성(Department)으로 명칭을 바꾸는 한편, 환경통계수집, 소수민족 커뮤니티를 위한 업무, 환경위해평가 등을 다룰 별도의 기관(Agencies)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Browner EPA 처장은 하원에서 통과될 동 법안이 모든 정책결정에 있어 환경적 관심이 변수리가 아니라 중심부에 놓이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최근 EPA는 지난 10년 ('89-'92)간 미국의 스모그 수준은 21% 감소되었으며 일산화탄소도 34% 감소되었고 또한 대기 중 납의 농도는 89%, SO₂는 23% 감소하는등 미국의 대기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54백만에 달하는 미국시민들이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하루의 90%를 실내에서 보내고 있음에 따라 실내공기오염물질인 라돈, 석면, 포름 알데히드, 담배연기, 살충제등이 문제화되고 있다. EPA에 의하면, 라돈오염 한가지 만에 의해 매년 14천명의 폐암환자가 발생되고 담배연기 비흡연자 3천여명이 폐암에 걸린다고 하였다. 따라서 미국 상원은 '92년 10월 실내공기오염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라돈, 석면, 기타 오염물질로 오염된 건물들을 파악하기 위한 입법을 통과시켰으며 '93 회계년도까지 매년 5천만불씩 을 배정하여 오염된 건물을 조사키로 하였다.

최근 EPA는 펠프·제지공장의 독성 대기·수질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한 강력한 규제안을 마련했으며, 동 안은 산업체와 환경단체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1년 뒤에 확정할 예정(시행은 '98년도부터)인데, 동 규제안이 시행될 경우 빨암물질인 다이옥신의 배출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성 대기물질의 배출도 70% 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에 대하여 미국의 산림·제지 협회는 산업체가 동 제안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1백억불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일본의 환경정책 동향

'93년 10월말에 중의원을 통과한 환경기본법의 주요내용은 일본환경청이 대기상태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대기, 수질, 토양등의 기준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안에 관하여 일본환경청장은 의무적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세 도입문제가 미결되었더라도 환경기본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우선적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의 NGO들은 지난 11월초 UNCED 합의사항의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포럼 2001"이라는 네트워크를 결성하였으며 이 시민연합은 환경과 개발 이슈에 관하여 정보를 수집·교환하고, 주요정책 대안 작성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각종 환경·개발이슈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거나 행동조치등의 주요한 활동을 전

개할 계획이다.

일본환경연합(회원 60만명)은 일본내 미군기지의 비행기 소음 문제에 대하여 위성턴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투쟁을 벌이고 있는 바, 미 해군측이 미국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동 지역에 대한 환경평가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